

작년 보험사기 1조... “의료인 등 가담땐 가중처벌 고려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내달 기준 제시
발생횟수·피해금액 지속적 증가

허위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로 취급하도록 정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오는 8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면서 양형인자 등을 통해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보험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현행 양형기준상으로 보험사기는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되고 보험사기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서 발생 횟수와 피해 금액도 지속 증가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유토이미지

해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해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3.2%, 6.7%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솜방

망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심에서 죄가 인정돼 유기징역이 선고된 비중은 20.2%에 불과했다. 43.8%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27% 가량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 가운데 3년 이상 징역은 2021년 기준으로 6%에 그쳤다. 나머지는 1년 미만(47%)이나 1년 이상 3년 미만(47%)의 비교적 가벼운 징역이 선고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낮다”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에서 일반적인 문서의 위조·변조가 아니라 허위진단서 작성 죄나 의료법 위반죄 등이 수반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로 취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구약식 사건과 벌금형 선택 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규율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단계에서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SK에코플랜트

‘1033억’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8일 서울 종량구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 종량구 중화동 우성타운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3개동, 총 213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총 도급액은 약 1033억원이다.

사업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가 지나는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시내는 물론 시외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북부간선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인접해 경기 북부지역 접근성이 좋다.

교육 및 생활인프라도 우수하다. 주변에 상봉초, 중흥초, 장안중, 중화고 등과 더불어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 CGV 등이 위치해 있다. 봉화산 근린 공원, 중량천 중화체육공원 등 녹지시설도 풍부하다.

사업지 인근에 중화2-2구역, 상봉7구역, 이문1·4구역 등 다수의 정비·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주거환경 개선 및 미래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스페이스BU 대표는 “탁월한 시공역량과 우수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주거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지방금융, 주주환원 확대… ‘분기배당’ 정례화 추진

JB금융, 이달 이사회서 정례화 의결
금융당국 밸류업 프로그램 발맞춰
BNK·DGB금융도 도입 논의 중



지방금융지주 중 분기배당을 정례화하는 것은 JB금융이 처음이다.

JB금융 관계자는 “JB금융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배당을 주주들에게 약속한 바 있고, 1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정례화는 해당 정책을 재확인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B금융의 분기배당 정례화는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춘 움직임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상장기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 가 현상)’ 해소를 위해 주주환원을 확

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낮은 배당률, 금융정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저평가를 받았던 금융주에 투자가 유입되면서 시중금융지주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30.8%(6월25일 종가 기준, KB 47.3% 하나 41.3%, 신한 20.6%, 우리 13.9%)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금융지주의 주가는 평균 14.1%(JB 28.7%, BNK 19.1%, DGB -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주주환원율이 높고 배당도 잦은 시중금융지주로 투자금이 몰린 만큼, 지방금융지주 또한 분기배당 도입을 고심하게 된 것.

이어 금융당국이 배당액 확정일을 결정일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배당 절차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지방금융지주들은 분기배당 도입을 더 미뤄두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 ‘배당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분기·중간배당 절차에서 배당기준일 기한을 삭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중간배당 시 3·6·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며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 액수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을 받을 주주 명단을 확정한 이후 배당액을 의결하는 구조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자는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분기배당을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할 요인이 줄어드는 셈이다.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 또한 분기배당 도입을 논의 중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그룹 내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며 “배당의 경우 금년도까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내년도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DGB금융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 주주 배당 확대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7월 첫 주 전국 8곳서 9754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경기 화성, 광주서 견본주택 오픈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9754가구(일반분양 685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팰

르퍼스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8개동, 전용면적 59㎡, 740가구 규모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수준으로 분양가(거주의 무기한 5년)가 책정됐다.

오는 2027년 개통예정인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가칭)과 정부과천청사역이 가깝고 과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용이하다.



/김대환 기자 kdh@

손해보험협회

신임 전무에 오홍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8일 신임 전무로 오홍주 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자문관(사진)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신임 전무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오 신임 전무는 1965년생으로 금성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성균관대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1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한 이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 보험감리국장,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